



11면

임실 덕치면 섬진강 구담마을
비대면 안심관광지 선정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음 12월 13일) 제2704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아파트 투기 '그물망 감시' 체계 구축

전주시, 한국부동산원과 손 잡고 불법 투기행위 합동 감시
부동산 거래 동향·통계 정보 공유 거래 안정화 대책 마련
개업 공인중개사 등 12명 거래 동향 모니터링 요원 위촉

전주시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위해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을 꾸린 데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과 손을 맞잡아 감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동향을 살피는 공인중개사 모니터링단과 시민들로부터 아파트 불법거래 제보를 받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관계기관, 부동산중개사, 시민 등이 함께하는 '그물망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전주시와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지사장 강대일)는 지난 22일 전주시청에서 부동산 불법투기행위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 가격 공시, 통계·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 구축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공동 지원체계 구축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 동향과 각종 통계 정보를 공유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거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

지부장과 부지부장, 사회적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대표, 개업 공인중개사 등 12명을 아파트 거래동향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모니터링단은 지역 시장에 정통하고 아파트 거래가격 동향에 밝은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시장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 불법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모니터링단은 ▲예교 ▲만성 ▲혁신 ▲효천 ▲신시가지 ▲완산1·2 ▲력진 1·2 등 9개 권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가격이 급등하거나 의지인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등 이상 징후를 점검한다. 또 이동식 중개업자나 뺏다방, 무등록 중개행위 등 특이사항에 대한 조사활동에 나서고 정례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제보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내에 차렸다.
온라인 신고센터에서는 회원가입 없이 실명인증 절차를 통해 누구나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전매제한 기간 내 사고파는 행위 ▲타인 명의



전주시와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는 지난 22일 전주시청에서 부동산 불법투기행위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역, 휴대폰 문자내역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한다. 또 신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한다. 반면에 거짓신고가 명백하거나 증빙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종결된 신고 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고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아파트 거래 정상화를 위해 꾸려진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해 총 66건을 적발하고, 분양권 불법 전

매 등 3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백미영 단장은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와의 업무협약과 아파트 거래동향 모니터링단,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시·군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도, 설 명절 어려운 이웃 지원계획 시행

내달 5일까지 집중 추진
생활 어려운 저소득가구
명절 지원금 지급
복지생활시설 110곳에
차례상 경비 지원 등

전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2021년 설 명절 어려운 이웃 지원계획'을 시행한다.
도는 전 도민이 함께하는 훈훈하고 따뜻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월 5일까지 설 명절 전 3주간을 집중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도 산하 공공기관 및 관련기관들과 함께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2,400세대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명절 지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 다중이용·독거노인·한센인가정 등 취약계층 260세대에 위문금·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생활인들이 합동으로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생활시설 110여 개소에 차례상 경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이용시설 56개소에도 운영에 필요한 위문품을 전달한다.
지난 18일부터는 전북도청 청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들은 자매 결연된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에 자체 모금한 성금으로 정(정) 꾸러미를 구입해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전달하고, 영상편지·손편지 전송 등을 통해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설 특별방역대책을 계획하고 있어 저소득 세대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도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복지 사업들이 추진 중임에도 한파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힘써 저소득 취약계층 모두가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상 기자

도, '사전 컨설팅 감시' 민원인까지 확대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 업무처리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
"도민들의 가려운 곳 긁어줄 수 있는 효자손 역할 할 것"

전북도는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당초 공무원에만 적용됐던 '사전 컨설팅 감시'를 민원인까지 확대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안심 보원'이다.
급격한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 법·제도와 현장의 괴리에 따른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어려움 해결하고자,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진행과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해법을 제시해 주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

를 면제해 준다.
도는 지난 2017년 3월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대상을 민원인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57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해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도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대상은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승인, 등록, 면허 등 인·허가를 신청한 자료, 공무원이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민원인은 행정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전북도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뢰서를 내려받아,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를 작성한 뒤, 해당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인·허가부서는 처리기한 연장, 애

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당 감사관실을 경우해 도 감사관실에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면 된다.
도 감사관실에서는 관계부서의 의견 수렴하고, 필요에 따라 감사원, 중앙부처 및 관계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을 받아, 정확한 해결방안을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부서에 회신하면, 컨설팅 감사를 반영해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도민들의 가려운 점을 시원하게 긁어 줄 수 있는 효자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효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